개교60주년 기념

경희평화워크샵

경희, 새로운 평화를 말하다

Kyung Hee Peace Workshop

2009년 12월 3일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개교60주년 기념

경희평화워크샵

경희, 새로운 평화를 말하다

Kyung Hee Peace Workshop

2009년 12월 3일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프 로 그 램

개회 및 1부 - 경희 평화 되돌아보기

개회　　송재룡(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래문명원 프로그램운영실장)
격려사　조인원(경희대학교 총장)
평화활동 사진 프리젠테이션
사회　　송재룡(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래문명원 프로그램운영실장)
발표　　권기붕(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직무대행)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토론1　임정근(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토론2　정연교(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Q&A
Coffee Break

2부 - 경희 평화 내다보기

사회　　김현(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래문명원 대외협력실장)
발표1　임성호(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
　　　　"탈경계 시대의 평화 패러다임 모색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 성찰적 민주주의로"
토론1　이화용(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GO대학원 원장 직무대행)
Q&A
발표2　홍기준(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평화학 및 평화운동의 국제적 동향 : 시사점과 과제"
토론2　박한규(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국제·경영대학 부학장)
Q&A
Coffee Break

3부 종합토론 - 경희 평화 함께하기

사회　　김홍우(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토론1　박홍순(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유엔협회 부회장)
토론2　이동욱([사]한국NLP협회 회장
　　　　　　인간과학연구소(Advanced Human Systemics Institute) 소장)
토론3　이삼열(전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토론4　정진영(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국제·경영대학 학장)
토론5　허우성(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비폭력연구소 소장)
Q&A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직무대행

경희대학은 1982년 이래 27년간 '평화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행사를 한 마디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제에 지난 학술대회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과거 경희대학의 업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 가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이든지 기억의 단초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제 자신의 일천한 체험으로만은 하지 못할 과거 업적의 평가와 미래의 구상이라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제를 수용하는 전제가 되기도 한 일이고, 이를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은 지금까지 학술행사에 직, 간접적으로 깊이 참여했던 분들의 경험을 면담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앞으로 평화학술회의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에 충실하자면 수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시간의 제한과 개인적인 노력이라는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몇 몇 분들만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밝힌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그 분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밝혀두고자 한다. 각자가 주신 의견들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되고 평가되었기에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오늘 발제의 취지상 발제자의 의견도 담아야 하는 주관성도 개제가 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

(경희와 평화 운동)

경희대학과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 경희 구성원들에게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려 진다. 즉 경희가 평화를 말하는 것은 경희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립자의 개인의 사상과 활동에서 시작된 운동이 경희대학과 일체화 된 것이다.

경희의 60년 역사에서 평화가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게 된 것은 8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잘 살기 운동'에 경희가 앞장을 섰다. 냉전의 골이 깊어지던 80년대 초 핵확산 반대 운동 등 평화에 대한 지구시민사회의 요구가 팽배해질 당시 Pax

UN의 기치를 걸고 경희는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그 결과 UN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지정하게 하는 결실을 거두게 되고, 이를 기념하여 UN과 함께 ‘평화의 날’ 기념행사의 일부로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희대학에게는 학술회의가 경희의 평화 정신을 기리는 기회이자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경희와 평화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그리고 오늘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평화의 가치, 평화의 실천운동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경희대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것이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일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늘 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스물 일곱 번의 학술대회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성과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보며, 부족한 점 혹은 한계를 짚어보고, 과거의 공과 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향후 평화 기념 학술회의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평화의 날 학술대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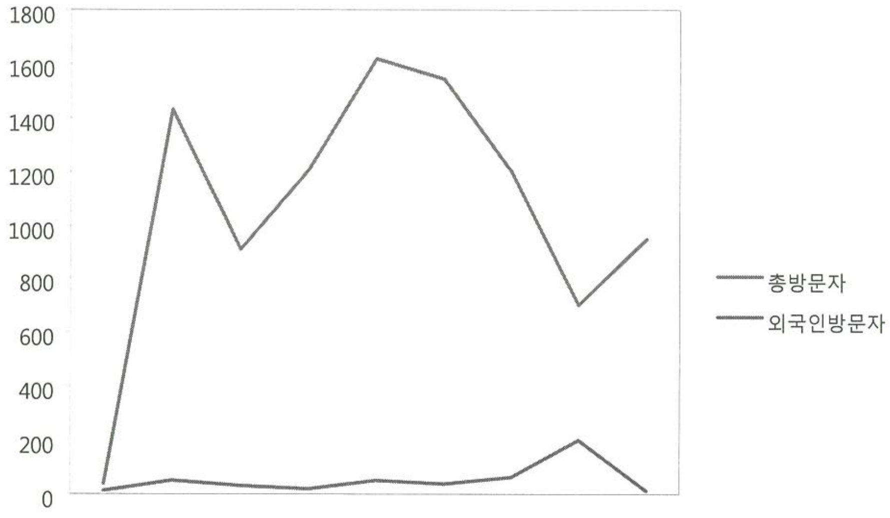
지난 스물 일곱 차례의 학술회의는 크게 시기적으로 그 주관자와 참여자들의 면면에 의해 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82년부터 83년까지는 경희대학교가 자체적으로 기념학술 회의를 했으며, 8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UN에서 참여함으로써 UN이 관여하는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86년에는 평화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종합예술제로 확대되었으며, 92년까지는 국내 정치학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제로 한 가장 큰 규모의 학술회의로 자리매김하였고, 93년 이후는 학술대회의 주제와 참여 폭을 넓혀 인문 분야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국내외의 유수 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99년에는 세계NGO대회의 일환으로 최대 규모의 학술 및 NGO 행사로 치러졌고, 2003년에는 필리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학술과 봉사 및 예술제가 종합된 Peace BAR Festival 형식으로 정착하였다.

아래의 표는 학술회의 규모 변화의 추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해 전체 참석자와 발표자의 숫자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처음에는 소규모의 일반적인 학술회의 정도로 시작하였으나 84년 UN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일차 확대되었고, 90년대 전체와 2000년대에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시기적 혹은 성격적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의 내용적 및 조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화의 날 학술회의는 평화의 날 기념행사 성격과 학술회의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연례 대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에 따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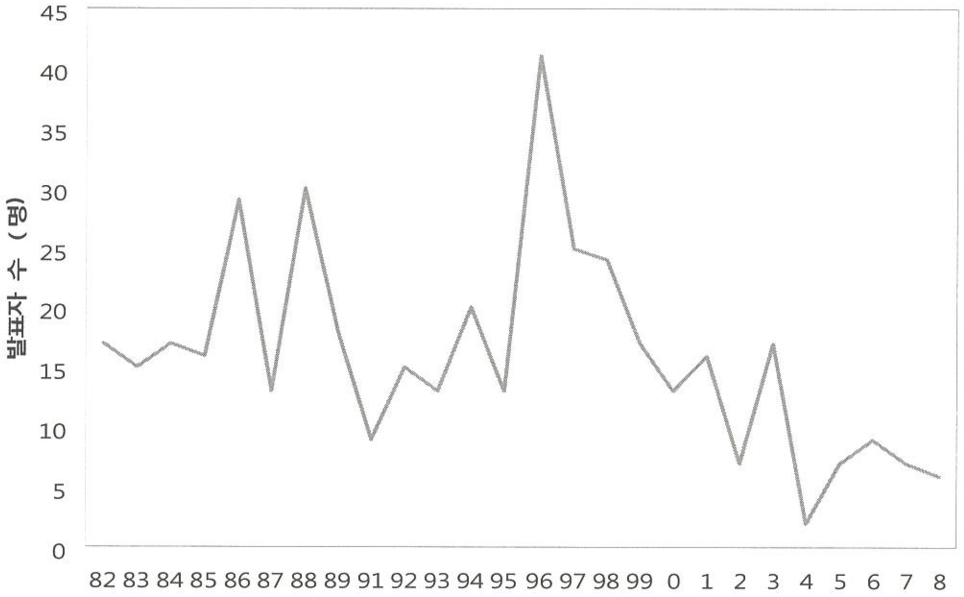
참여의 군도 부분적으로는 그 성격이 달랐다. 셋째,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93년 이후에는 학술회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과 조직이 있었고 이 상설조직이 학술회의 참여자의 섭외와 준비 그리고 사후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넷째, 평화의 날 기념행사는 UN 및 UN관련 단체(한국 UN협회, UNESCO 등)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했었다. 다섯째, 기념행사와 학술회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을 공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여섯째,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주요인사 급으로는 매년 같은 사람이 초청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그 면면이 매 회의마다 달랐다. 일곱째, 90년대 후반에는 학술회의 내에서도 인류사회연구소와 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부분, 나아가 밝은 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부분 등으로 나눠졌다. 여덟째, 학술회의의 대주제의 성격에서 변화가 있었다. 크게 보면 80년대 전반에는 Pax UN을 주로 논의했고, 후반에는 동북아 평화질서에 대해서, 90년대 초반에는 신세계질서에 대해, 중반에는 인간성과 도덕 회복의 문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21세기 신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의적으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아홉째, 평화연구소 혹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조직할 당시 학술회의에서는 일군의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경희대학이 추구하는 평화의 사상과 모델을 제시하고 토론 하였다.

이 외에도 평가자에 따라서 또 다른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평화회의의 공과 과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사항들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표1: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 참여자 각 3년 별 평균 추이)[1]

1) 매년 참가자의 숫자 변화가 많고, 일부의 경우 추산을 해야 하는 관계로 추세를 판단하기 좋게 3년씩 나눠서 평균 규모를 산정하였다.



(표2: 학술회의 부분 발표 논문의 양적 추이)[2]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의 성과와 한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물 일곱 차례나 되는 행사를 한 마디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매 학술회의를 각기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학술회의든 기념행사이든 지속적으로 계속된 행사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매 행사들은 각기 그 나름의 의미나 중요성을 참여자나 학술 발표의 질을 저울질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일단 그 이상의 장기적 효과라든가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속적 행사의 경우는 결국 매회 참여자들의 면면에 따른 평가보다는 외부인들이 혹은 사회에서 이러한 행사에 대해 어떤 인식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지가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경희 내 외부에서 이 행사 혹은 학술회의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행사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평화의 날 기념행사와 회의는 우선 최소한 경희 구성원들에게는 경희가 표방하는 평화라는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계기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방식과 규모 혹은 효과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나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다.

2) 자료집에 일부 누락된 년도는 포함되지 못함. 개략적으로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발표논문 숫자만을 집계하였음. 99년 서울 NGO 대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술회의가 함께 있었다. 하지만 학술회의의 전반적인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평화관련 학술회의 부분만을 포함했다.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행사라는 형식을 통해 내 외부 참여자들이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평화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평화에 대한 담론을 야기하고 그 담론의 중심에 경희가 자리매김함으로써 경희와 평화라는 문제가 구성원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평화의 날 기념행사와 회의가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평화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든지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희대학이라고 하면 평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의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최소 UN을 중심으로 한 UN 서클에서 경희의 평화관련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의 날 행사 자체에 UN 기구 관련자들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UN에서 보여주는 경희에 대한 관심과 인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일반 국제사회에 그리고 국내 일반에서 경희의 평화관련 노력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평화의 날 행사 및 학술회의가 주요 미디어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참여자들의 후일담이 긍정적인 루프(Loop)를 형성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는 증거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한적인 성과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해 혹은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기념행사이든 학술회의이든 그 참여의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념행사의 참여자들은 거의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초청되었으며 초청 군(pool)을 확대할 수 있는 인맥 또한 제한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학술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다. 학술회의에서도 영향력이 큰 주요 인사들이 초청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을 제외하곤 지속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일회적 방문에 그쳤다. 그 결과 일반 학술회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 평화학술회의의 가장 큰 한계였다.

또 다른 요인은 본원적인 의도 혹은 구조적인 측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 날 행사는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측면과 평화 사상 혹은 메시지를 제기하고 전파하는 학술회의 그리고 평화를 보다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는 순수 학술회의 등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이 여러 가지 의도나 목적을 하나의 행사를 통해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여기에 2004년까지는 국제GCS 본부 행사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실로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비용과 시간, 효과 등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학술회의 참여자들에게는 이러한 복합적 성격의 행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 모호함을 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경희 내부 구성

원에게도 이 행사가 학술회의인지, 대학 내부의 행사인지 혹은 밝은 사회 운동 본부의 행사인지 등 명확한 구분을 짓기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다.

당시 교내 외 안팎의 정치적 환경 또한 이러한 모호한 성격을 가지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행사였기에 대규모로 진행하거나 외부 홍보(Publicity)를 한껏 도모하기도 어려웠고, 국내의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섭외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교내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비판적 시각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명확한 선을 그어서 기념 학술회의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일, 특히 문명원이 학술회의를 담당하면서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또다른 난제를 낳게 된다. 즉 GCS와의 관계이다. 학술회의와 그에 수반한 예술과 봉사 행사의 주체가 전적으로 대학이 되면서 평화의 날 행사가 가졌던 또 다른 의미인 밝은사회운동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치 않았고, 그러면서 평화의 날 행사 전체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축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평화 아이디어 혹은 메시지의 확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참여자들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학술회의 프로시딩이라는 전통적이고 매우 수동적인 방식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한 번의 회의가 다음 회의의 초석이 되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을 연결시키는 식의 연속성, 참여자들의 그룹의식, 관심과 연구의 공유 등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평화 메시지 확산의 제도적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매 회의, 행사가 조급하게 준비되고, 일정에 쫓겨 참여자가 섭외되며, 발표 논문의 질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게 되며,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 없이 행사 후에 금방 잊혀져가는 결과를 낳았다. 개별 발표자를 제외하곤 누구도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를 통해 뭔가 의미있는 학술적 성과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7년간의 노력에 비춰 볼 때 그러하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좋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좋은 학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특히 최근 회의에서는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자들의 면면에서 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학술회의의 주제와 발표 내용들이 평화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평화연구, 평화 운동의 증진 등과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기여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최근 회의와 관련해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맞나'라는 의아함이 든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과 효과의 측면이다. 즉 지금까지 많은 돈을 썼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혹은 지나치게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닌가 등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시각이 난무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평화를 학교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세우는 곳에서 그리고 평화의 날과 해를 있게 한 당사자가 평화의 날에 어떤 형태이든 기념식을 하고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규모나 방식이 어떠했어야 할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난 27년 동안 해 왔던 방식과 형태 이상이나 이하를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 규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희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평화의 날 행사, 학술대회라고 불릴 수 있었겠는가 등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지난 행사들을 돌아보면서 주목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비용과 효과의 대비성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행사들이 그 내용과 효과에서 의도 혹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서 공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발제자를 포함한 여러 면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물론 각자의 시각에 따라 미흡함을 평가하는 정도와 부분이 달랐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향후 보다 발전된 형태의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되기 위한 제언)

1)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는 다른 목적의 행사들과 함께 치러지면서 참여자들의 발표 및 토론의 내용에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학술회의의 참여자들에게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평화회의의 장(venue)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했고, 학술적 지식의 창출과 평화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결과의 축척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는 어떤 성격과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밝은 사회 운동의 연차 대회라는 성격과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발제자가 제안하는 바는 과거에는 밝은 사회 운동과 경희대학을 명확하게 구분 지우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사회운동 단체로서 밝은 사회와 학술기관으로서 경희대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에서도 보다 분명한 역할 나눔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실 최근 있었던 몇 번의 행사가 분리되어 준비되고 치러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이미 두드러지고 있다. 이젠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바로 경희대학과 밝은사회가 서로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함께 소기의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밝은사회와 경희대학이 서로 소통하지 말자거나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각자가 가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희학원과 밝은사회 운동의 숭고한 이념인 평화를 기리고 평화를 확산하자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경희학원은 학술기관인 이상 학술적인 전파 방식인 학술회의를 평화의 날의 중요한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이를 경희대학의 중심에 보다 확고히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경희의 행사이면서도 경희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밝은사회 본부는 향후 평화 운동, 평화의 날 기념 등을 밝은사회 국제운동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고 한다. 경희 구성원을 포함해서 밝은사회 운동 참여자는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경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에 대한 사상적 연구와 학술적 활동에 추동할 수 있다면 평화운동은 학술과 실천의 양 날개를 달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술회의는 평화라는 주제를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평화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인식공동체 형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

평화의 날에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 가장 손쉬운 평화 메시지 전달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학술회의들은 학술회의 참여자와 주제의 선정에서 평화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청중, 나아가 일반사회에도 평화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평화가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시대에서 평화가 주로 의미하는 바 또는 평화가 주로 이해되는 바를 가치로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참여자들의 관심이 공유될 수 있고, 이런 공유의식이 있을 때에만 서로 간에 대화와 교류가 가능하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행위와 관심이 모아져야만 지속될 수 있다. 학문적 관심의 공동체인 인식공동체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계이자 동시에 인식공동체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3) 상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조직 혹은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지난 학술회의 개최 경험상 조직적인 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나마 평화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와 진행 및 결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가 주관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섭외를 하느냐에 따라 참여 학자 집단이 달랐지만 그 또한 어떤 학자 집단을 대상으로 잡느냐는 기획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매년 학술행사인 이상 상당한 수준의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기구 혹은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회적 행사로서 학술회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술회의를 통해 평화의 메시

지를 전파하고, 평화의 사상과 이론을 발전시키며, 평화를 논의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자 할 때는 특히 상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술회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집단을 관리하고 발굴할 수 있어야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례 학술회의가 진정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다.

4) 평화 사상과 모델과 관련해서는 경희 학파를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경희대학이 주관하는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관련학자들의 개인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반 학회 학술회의와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갖는, 그 자체가 평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대회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학술회의의 주제 선정뿐만 아니라 발표와 논의 내용에서도 초점(Thematic Focus)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술회의 장에서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적 주제(대화의 상대방)가 있어야 하고, 교내외적으로 경희적 접근, 모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의 학술 활동이 종국적으로는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인 오토피아적 지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상과 이론의 전파는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인구에 회자되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거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을 중심으로 했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랜 기간의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미했으며, 지속되기에도 한계점을 가졌던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에서 다시 그러한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조직의 와해 이후 아무도 오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된 지금의 논의 부재 상황에 대한 우려에 있다.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잊혀지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관건은 강요되지 않는 개별적 학문적 관심에 기인한 학자들의 집결체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과거 목요세미나, 인류사의 전철을 어떻게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는지 등에 있다.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보다는 훨씬 더 순수 학문적, 실천적 연구 과제를 평화 주제 분야와 관련해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 외곽에 다양한 형태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시로 관심사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자 집단 형태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각자의 관심사가 충분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유되는 인식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되고 발전된 오토피아적 가치와 이론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오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오토피아적 가치와 이론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서도 파동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그러한 메시지 전파의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경희적 평화 이야기

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5) 평화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장(場) 혹은 매체로 조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화 분야의 주요 인물들을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유수한 해외 평화단체, 연구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단순한 일회성 학술회의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담론의 장, 평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수단, 평화를 희구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참여자에게는 좋은 사람과 좋은 얘기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소위 관련 분야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취지에서 유명 인사들이 초청되고 학술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유명 인사들의 참여가 몇 몇 지인들로 한정되었고, 그들의 면면이 학술적인 부분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었으며, 유명한 학자들의 경우도 그들의 참여가 긍정적인 소문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일회적 관심을 끌 수는 있었지만 그 관심이 평화의 메시지로 전환되거나 경희의 평화에 대한 역할을 부각 하는 계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유명인은 일반적인 유명인 범주에서 선정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평화적 사안과 관련해서 학문적이든 실천적 명성을 획득한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참여가 기대되는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술행사 및 메시지화 작업에 관여할 수 있을 때 평화의 날 학술회의 또한 그들의 명성을 통해 외부에 인식되고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유수하고 유능한 학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경희대학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희대학과도 보다 실질적 관계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술회의가 학술회의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관련한 경희대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가 가지는 메시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좋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에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다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용한 일회적 홍보나 학술회의 프로시딩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국제적이고 명성 있는 학술대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T로 대변되는 새로운 매체와 방식을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술회의 기간 중에 발

표되는 논문과 토론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평화에 관한 연구와 활동의 결과물이 항시적으로 열람될 수 있도록 Open Ware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학술회의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서로 배우는 장(場)이 될 때 매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지식(Knowledge)과 동지의식(Comradeship) 그리고 함께 논의하는 즐거움(Pleasure in Talking Peace)이 있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를 “The World Peace Conference”라고 부를 날을 기대해 본다.

7) 언급한 제안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내 평화 관련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의 내용적 형식적 변화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단발적 노력보다는 관련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시적 주체를 둘 필요가 있다. 과거 평화연구소가 그랬듯이 향후에도 보다 광범위한 일을 다루는 미래문명원보다는 평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연구소 형태의 조직이 적합할 것이다. 위 제언들은 상시적 조직이 없이는 구현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평화연구소의 과거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아직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도 큰 의미에서 고유 영역의 확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문명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까지 포함하여 평화와 관련해 조직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방안이든지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8) 마지막으로, 기존 학술회의에 수반되었던 문화, 예술적 부분과 사회 봉사적 부분은 별개의 조직에 의해 별개의 평화의 날 기념행사로 학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좋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Peace BAR Festival 방식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문화예술제와 구성원 참여 봉사 프로그램은 평화의 날과 평화라는 핵심 가치를 경희 구성원 전체와 함께 공유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경희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문화 예술 및 봉사 활동이 과거와 같이 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의 부대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때 오히려 그 참여나 효과에서 현저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회의와는 분리하여 그 중요성과 규모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올해는 6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별도의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평화의 날 기념행사와는 별도의 문화예술, 사회봉사 행사를 기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행사의 중복일 가능성도 있다.

평화의 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념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으로 하든지 그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학술 행사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술제는 또 다른 기획이 될 때 보다 실속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여러 부분이 혼재해야 할 경우 부분별 주체를 별도로 하고, 학교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계기만 만들면 된다. 하나의 조직 혹은 팀(Team)에 한 가지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준비와 마감에서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다.

평화의 날은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장 좋은 수단적 기념일이다. 이에 대한 경희대학의 주인의식을 더욱 공고히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주인의식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때 경희대학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꿈꾸는 사람의 머리 속에 평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이 자리를 통해 함께 가졌으면 한다.

탈경계 시대의 평화 패러다임 모색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 성찰적 민주주의로*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

I. 서론

평화 개념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다. 수많은 요소를 포괄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요소들을 함축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달리 이해할 수 있다. 협의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볼 수 있다. 의미를 조금 넓히자면, 전쟁뿐 아니라 기타 여러 형태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볼 수 있다. 보다 광의로 보자면, 폭력뿐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는 다양한 박탈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02년, 2520쪽). 평화를 광의로 이해하는 대표적 학자로서 갈퉁(Johan Galtung)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 못지않게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없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평화연구의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Galtung 1969). 이때의 적극적 평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심지어 심리 등 제(諸)차원에서의 안녕, 복지, 평등, 평온,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긍정적 가치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워낙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다른 개념들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광의로서의 평화 개념은 정의, 화해, 조화, 욕구충족 등과 크게 겹쳐지면서 상호간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혹은 무엇이 부분이고 무엇이 집합인지 판단하기 힘들게 한다. 이 개념들 간의 관계가 모호한 탓에, 평화를 위해 정의와 화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정의와 화해를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공허한 순환논리에 빠지기 쉽다(Lambourne 2004). 심지어 갈퉁은 그의 책 제목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라는 동어반복어로 꾸미고 있다(Galtung 1996).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 속에서 일부 학자는 평화 개념에 단일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복수의 정의를 내려 "평화"가 아닌 "평화들"로 이해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Dietrich 2006).

평화 개념에 수반되는 인식상의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어려운 과

---

* 이 글은 다음의 졸고에서 모티브를 얻고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용했음: "지구화 시대 정당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 구딘(R. Goodin)의 '내적 숙의' 개념의 탐색,"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9년 6월 5일 (건국대). 이 발표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공동학술대회(2009년 11월 27일, 경희대)에서 약간의 윤문을 거쳐 다시 발표되었음.

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대신 이 글은 오늘의 전환적 시대환경 속에서 어떠한 당위적, 이론적 패러다임을 취할 때 평화에 대한 보다 적절한 모색을 시도할 수 있을지 논하고자 한다. 기존의 주류 패러다임들을 평가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오늘의 시대환경 속에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모색 노력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살피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이면에는, 어떠한 실제 차원의 평화 노력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거시적 시대환경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적절한 당위적 패러다임에 의해 견인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되고 있다. 만약 오늘의 거시적 시대조류에 잘 맞는 당위적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관점에서 평화 사안에 접근한다면, 전적으로 추상적이고 보편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비해 좀더 시대맥락상 적실성이 높은 평화의 개념 및 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봄직하다.

오늘날 시대환경의 특징 중 탈경계 현상이 두드러진다. 탈산업화로 인해 각종 이익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회, 경제 제(諸)부문 간의 경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탈냉전 조류는 글로벌 수준뿐 아니라 국가사회 수준에서도 이념집단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은 전통적인 계급 경계를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바운더리를 넘어 사회문화적 이슈에 따라 정체성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 혹은 정보네트워크화는 각종 경계를 뛰어넘는 의사소통과 구조적 연계를 촉진시킴으로써 탈경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탈경계 현상은 지구화(세계화)이다. 오늘날 지구화는 국가경계의 절대성과 폐쇄성을 낮추고 침투가능성, 모호성을 증가시켜 각종 이해관계가 국가경계 내로만 국한되기보다 경계를 넘어 복잡하게 얽히게 한다(임혁백 2000, Held et al 1999, Archibugi et al 1998, Cohen 2001).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존파괴 등의 환경 문제, 에이즈나 사스, 조류독감, 신종 플루 같은 질병·건강 관련 이슈, 핵에너지 사용과 핵폐기물 관리,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관리, 열대우림 개발, 재생가능 및 지속가능 자원 개발, 세계금융시장, 세계노동시장, 해양법, 지적재산권, 천연자원 보존, 멸종위기의 동물 보호, 난민 문제 등 수많은 이슈에 걸쳐 초국적 이해관계가 국가경계를 넘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탈경계 시대조류가 평화 개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한편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경계가 낮아짐에 따라, 경계를 사이에 두고 다른 집단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 노사 갈등, 도농 갈등, 지역 갈등, 계급 갈등, 이념 갈등, 문화 갈등, 민족 갈등 등이 탈경계 시대를 맞아 원만히 완화된다면 자연히 갈등의 반명제인 평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탈경계 시대환경은 평화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경계를 가로질러 복잡하게 연계되는 여러 이익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할 권위체와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갈등을 흡수하고 조정, 화해를 주선하기 힘들 수 있다. 이익 조정이 안 될 경우 평화(어떻게 정의 내리든 간에)를 기대하기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익 조정의 핵심 무대인 국가의 경계가 낮아지는 지

구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주적 동의에 입각한 이익 조정을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하다. 특히, '해당이익의 원칙'(principle of affected interests), 즉, 어떤 공적 사회적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표현, 투표, 시위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지구화 등 탈경계 조류로 인해 현실상 실천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은 탈경계에 대한 민주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Dobson 2007, Eckersley 2007).

이 글은 탈경계 시대에 평화(어떠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든 간에)를 모색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데서 문제의식을 찾아, 여러 갈래의 탈경계 추세에 조응하며 평화를 위한 민주적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탐색한다. 이는 매우 넓은 주제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바람직한 당위적 관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위적 인식을 담은 이론적 관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현실에서 평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가정이다. 그 당위적 인식은 실현가능성도 담고 있어야 하겠지만, 설혹 실현가능성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현실의 평가기준 그리고 미래 변화의 지향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의 구성은 우선 탈경계적 시대맥락상 평화 노력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패러다임들을 다룬 후 보다 적합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II절에서 탈경계 현상이 심화되면서 명확한 사회경계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이론적 적실성 및 현실적 유용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평화 추구 노력의 인식적 길잡이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한다. III절에서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현대공동체주의도 고유한 사회적 맥락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차원의 다양한 이익과 정체성이 세계적으로 얽히며 특정 사회영역을 뛰어넘는 탈경계 시대를 맞아 평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기 힘들다는 점을 상술한다. IV절에서는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담론'도 평화 추구를 위한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그 분석단위가 너무 거시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로버트 구딘(Robert Goodin)의 '내적 숙의'에 입각한 '성찰적 민주주의'가 탈경계 시대환경 속에서 다각도, 다차원, 다의미의 평화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유망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II.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

계약론이든 공리론이든 여러 갈래로 발전해온 자유주의 전통에서 공통되게 찾을 수 있는 전제는 사회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분명한 사회경계 내에서 어떠한 가치와 실제를 추구해야 할지가 자유주의 관점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가경계가 명확한 절대주권국가체제에서는 평화 모색의 인식적 길잡이로 잘 작동했을지 모르지만, 각종 경계, 특히 국가경계가 낮아져 경계초월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는 오늘의 전환적 시대를 맞아서는 과거처럼 높은 적실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우선 계약론적 자유주의가 명확한 사회경계를 가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자. 계약론적 자유주의 전통의 이론적 선구자인 홉즈와 로크 공히 자기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독자적 개인들이 함께 사회계약을 맺어 사회와 정부를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전개한다. 일단 사회가 형성된 후 그 사회의 운영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홉즈와 로크는 크게 상반되지만, 계약참여자들이 자발적 동의로 만들어 생활하는 무대로서의 사회와 외부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상정한다는 데서는 일치한다. 그들의 고전적 사상은 현대에 와서 20세기 중반 롤스(J. Rawls)에 의해 보다 추상적 차원에서 일반화된다. 롤스는 시원(始原)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적절한 정의(正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세우는 장으로서 '다른 사회들로부터 고립된 폐쇄적 사회'를 가정한 후 그 사회에서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원칙들에 대해 논한다(Rawls 1971). 벌린(I. Berlin)도 주로 정부권력이나 사회 지배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경계를 가로지르는 외부로부터의 규제와 억압에 대해서는 논의를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경계 내 담론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Berlin 1984).

공리론적 자유주의 전통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효율성과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찾음에 있어서 그 다수가 살고 있는 명확한 사회경계를 상정한다. 무엇이 그 사회를 위한 선인지에 대한 확정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론적 가정에 서있기 때문에, 공공선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자유롭게 조직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들의 선호와 선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집합되는가에 있다(Beetham 1993, 57). 그러한 선호를 반영해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계구분이 명확하다. 공리론적 자유주의자가 볼 때, 민주주의란 국가경계 내 개인들의 선호를 자발적 교환, 거래, 조정을 통해 집성(aggregate)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전체를 위한 공공선은 국가경계 내에 존재하는 선호들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이라는 생각이다. 개인뿐 아니라 이익단체의 선호를 주목하는 다알(Dahl) 류의 다원주의에서도 이익단체들이 활동하는 무대를 규정하는 명확한 국가경계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정당, 압력단체, 노조, 선거조직, 시민단체 등 여러 중간매개체들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들에 주목하는 비담의 관점에도 사회경계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Beetham 1993, 64).

사회경계 내 구성원들의 이익을 잘 집성함으로써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 관점은 그 실효성과 관련해 여러 논쟁을 낳는다. 비판론자들에 의하면, 개인들의 주어진(고정된) 선호를 자유주의적으로 집성해 사회적 결정에 최종 도달함에 있어서 누구나 동의할 만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한다(Miller 1993). 어떤 의사결정 방법도 자의적이고, 많은 경우에 균형점에 도달하기 불가능하고 또한

전략투표(혹은 전략선택)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심투표(혹은 진심선택)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결정을 함에 있어서 꽁도르세(Condorcet) 방식으로 최적의 합일점을 찾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또 꽁도르세 방식과 보르다(Borda) 방식이 상반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이익집성의 어려움은 탈경계 시대조류로 인해 다양한 이익들이 기존 경계를 건너뛰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사회경계 내에서도 최적의 이익집성을 찾기 힘든데, 하물며 이해관계가 각종 경계, 특히 국가경계를 넘어 얽히고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자유주의적 이익집성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각종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해 갈등요소로 쌓일 경우, 평화를 어떠한 다양한 의미로 이해하든 그 모색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존재하는 사회이익들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적으로 집성하겠다는 자유주의 관점은 이익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모호성과 급변성을 갖게 될 경우 실효를 내기 힘들뿐 아니라, 사회의 유동성에 맞춰 새로운 시민적 이익을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March and Olsen 1986, 355). 탈경계화는 사회구조의 유동성을 가속시키며 사회이익의 파편성과 가변성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관점에서처럼 기존 이익이나 선호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새롭고 적실성 있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사회경계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의 이익과 선호만 고려할 경우, 법적 경계 밖에 있지만 우리사회의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역으로 우리사회의 결정으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이익은 간과하게 되어 결국 전반적으로 적실성의 문제, 나아가 정통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테일러(C. Taylor)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소외의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한다(Taylor 1994). 자유주의는 합리성, 독립성, 평등성을 갖춘 완벽한 개인을 전제하는데, 현실에서는 개인이 정책의 의제, 우선순위, 대안 결정 등을 합리적, 독립적, 평등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이 개인의 완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의 상실, 소외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며, 사회구성원은 기존 사회규범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 기존 규범을 대체할 대안적 규범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잃게 된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테일러의 비판은 지구화 등 여러 갈래의 탈경계 조류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설혹 개인이 사회경계 내에서 합리성, 독립성, 평등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해도, 탈경계 시대를 맞아 각종 이익이 경계를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에서는 그나마도 하기 힘들어진다. 그만큼 사회이슈와 그 결정과 관련해 사람들은 효능감(efficacy)을 잃게 되고 소외에 빠지게 된다. 완벽한 개인성 가정에 입각한 자유주의 관점은 탈경계가 심화되어 사회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저하될수록 현실로부터 멀어지며 적실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탈경계적 시대맥락에서 각종 갈등을 풀고 공정한 사회적 결정을 이끌며 평화 모색의 인식 틀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인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 인민의 동의(popular consent), 민의(popular will)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인민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회경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누가 선거 투표권을 갖고 자발적이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인민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의 의사가 민의로서 사회규칙(정책) 결정 시 존중·반영되어야 할지, 그 사회규칙은 공간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서 효력을 지니는지, 대표자들이 정책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인 국민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지? 이러한 일련의 의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자유주의 관점이 평화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추동할 수 있다. 과거 절대주권국가 시대에도 외국과 국제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주권재민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점령, 병합, 예속 등이 있지 않은 한 사회결정의 최종 주체는 국가경계 내의 행위자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탈경계 시대를 맞아 그 결정주체, 즉 민주적 주체인 국민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회경계가 전에 비해 모호해짐으로써 상기 의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 모색의 패러다임으로서 자유주의의 시대 적실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핵심 원리인 상충되는 이익간의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 타협, 조정이야말로 평화 개념에 직결된다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원리 역시 탈경계 조류의 심화에 의해 그 적실성과 효과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이익이 자유롭고 충분히 표출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여러 이익간의 흥정과 타협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간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한 게임규칙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사회성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각종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영역의 탈경계가 심화되고 특히 국가경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각종 경계를 가로지르는 너무도 다양한 이익들을 잘 표출하고 전달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이 복잡하게 얽히고 급변하는 초경계적 이익들 간의 조정을 이끌 만한 강제력 높은 규칙이나 명확한 규범도 존재하기 어렵다. 이처럼 상기 두 가지 조건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자유주의적 이익조정 원리의 실천을 통한 평화 모색의 길이 더욱 험난해진 것이다.

각종 경계가 침식되고 있는 오늘날, 이슈별 '관련 공동체'(relevant community)의 범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그 범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또한 범위를 규정하는 경계 내에만 머물지 않고 경계를 가로질러 활동하는 이익들이 워낙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등장했다 변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자유주의 관점에 따라 중간적으로 조정, 집성하려 할 때 잘되기 힘들고 각종 갈등이 원만히 해소, 흡수될 리 없다. 이처럼 오늘날은 주권재민의 실천, 그리고 사회이익의 중간적 조정이라는 자유주의의 양대 핵심 원리가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없는 시대환경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평화 개념에 어떠한 다양한 정의 내리든 간에, 자유주의 패러다임에만 의존할 경우 평화 개념에 직간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갈등해소, 공정한 사회적 결

정, 생존과 번영을 향한 개인적 욕구의 충족, 상대방과의 화해 등 여러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근본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공동체주의 관점의 한계

자유주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20세기 후반 이래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현대 공동체주의는 특정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과 고유한 역사적 전통을 인간행동 및 사회적 진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삶의 무대이자 때론 실천 단위로서의 특정 사회공동체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다. 그 점에서 공동체주의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경계의 모호함과 초경계적 이익들의 복잡한 교차에 따르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 경제, 문화, 법, 정치 차원의 다양한 이익과 정체성을 집단, 지역, 부문, 국가, 세계 등 여러 수준의 경계에 걸쳐 얽히게 하는 탈경계 시대환경과 높은 조응성을 유지하면서 평화 모색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에는 공동체주의도 한계가 너무 커 보인다.

헤겔이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독립적, 합리적, 보편적 개인상(像)을 비판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자아를 찾는 구체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닦은 이래, 개인보다는 사회공동체에서 각종 당위적 가치를 향한 추동력을 찾는 지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 사회공동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개인에게 친밀성, 정체성, 충성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로 이해하는 학자가 많다. 예를 들어, 또끄빌은 미국민주주의의 성공요인을 실용적 가치관을 지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각종 결사체에서 찾는다. 니스벳(R. Nisbet)은 가족 및 친족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상호도움에서 해답을 찾는다(Nisbet 1994). 그는 개인과 사회 사이를 매개하는 가족과 같은 소규모 집단의 기능적, 심리적 중요성을 주목하며 현대에 와서 가족보다는 추상적 개인에 기반을 둔 문화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의 해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니스벳이 보기에 바람직한 공동체의 추구는 산업체, 정부, 노조 같은 비개인적(impersonal) 조직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렌트(H. Arendt)는 소규모 지역자치체인 워드(ward)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참여해 공적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이상(理想)으로 보았다(Arendt 1984). 실제로 인류역사에 획을 그은 혁명들은 직업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소규모 결사체들에 의해 이끌렸으며, 상호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이 결사체들이 구체적 행동으로 연대할 때 역사의 진전이 이루어져왔음을 강조한다. 올든퀴스트(A. Oldenquist)는 각자 자기가 속한 소규모 집단에 대해 갖는 충성심, 심지어 집단이기주의가 사회를 묶어왔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대한 도덕적 열성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너무 크고 보편적인 사회이기보다는 독특한 고유성을 지녀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현대인의 사회적 삶이 위

기에 빠진 이유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집단에 속하거나 너무 크고 보편적인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고유한 집단정체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Oldenquist 1994).

공동체주의자는 이처럼 소규모 공동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설혹 소규모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체의 특수성과 맥락성에 주안점을 두며 경계지향적 성격을 견지한다. 예를 들어, 테일러는 고유한 역사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전통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문화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 맥락에 맞게 존재가 정의된다고 말한다(Taylor 1994). 맥킨타이어(A. MacIntyre)도 개인의 행동, 의지, 그리고 인식은 역사적 환경과 맥락 내에서 정해진다는 논지를 제시하며, 인간은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미래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전통 속에서 자기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구체적 도덕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MacIntyre 1984). 또한 월린(S. Wolin)도 전통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몰(沒)역사성을 비판하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는 임의로 골라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보편적일 수 없는 고유한 역사 맥락의 일상생활에서 유기체처럼 형성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Wolin 1994). 그는 소규모 단위의 분권화 체제에서만 다양성과 참여에 기반을 둔 역사적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소규모 공동체를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고유한 역사맥락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역사발전과 민주주의의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면 경계초월적 사회조류가 커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환경과 잘 조응할 수 있을까? 명확한 사회경계 내 이익집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각종 탈경계 현상으로 인해 한계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역사적 사회맥락을 뛰어넘기 힘든 공동체주의도 새로운 시대환경에 조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특히 여러 상충되는 입장과 이익들을 조정해 갈등을 풀고 공정하게 사회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평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대명제와 관련해 볼 때, 공동체주의가 경계지향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탈경계 시대에 평화 모색의 노력을 이끌 수 있는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공동체주의 관점이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규칙 결정을 위해 어떠한 과정과 기제를 제시하는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커진다. 우선 마치(J. March)와 올센(J. Olsen)의 경우, 자유주의의 이익집성(interest aggregation) 모델을 비판하며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선을 향한 이성적 숙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신뢰를 쌓고, 집단 의지를 형성하는 가운데 화학적 이익통합(interest integration, 단순한 물리적 이익집성과 구분되는)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March and Olsen 1986). 즉, 마치와 올센은 사회구성원은 자기이익뿐 아니라 공적 이익도 추구하는 (잠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동기에 따라 다양한 이익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다는 기본 가정에 서서 이익통합 모델을 제창한다.

이익통합 모델의 핵심은 사람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선호를 바꿀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기본가정에 있다. 이러한 마치와 올센과 비슷하게, 선스틴(C. Sunstein)도 인간의 선호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exogenous)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즉 내인적(endogenous)인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단순한 선호집성의 기제로 봐선 안 되고 현재 존재하는 선호들을 공동선을 향해 바꾸어나가는 기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Sunstein 1994). 밀러(D. Miller)도 배심원 제도 등 여러 실례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의 선호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이익통합의 실현가능성을 높이 본다(Miller 1993, 83). 한편으로 볼 때, 이익통합 개념은 탈경계 시대에 수많은 이익들이 다국적, 다차원적, 다층적, 다부문적으로 교차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당위적 목표일 수 있다. 기존의 고정된 이익들을 집성해 최적의 사회적 결과를 내고자 하는 정태적 자유주의 관점이 탈경계 시대에는 실현가능성에 타격을 받지만,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공동선을 향해 변할 수 있다는 동태적 이익통합 개념은 상대적으로 유망하게 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익통합 개념을 사회공동체 경계 내로만 국한시켜 그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움직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데서, 탈경계 시대를 맞은 기존 공동체주의 시각들의 시대적 한계를 찾을 수 있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나온 민주주의 모델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 바버(B. Barber)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 모델을 제시하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공적 참여를 통해 공적 목표를 향해 함께 생각을 전환하며 자기실현을 하는 지난(至難)한 과정 자체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본다(Barber 1994). 공적 목표는 몇몇 전문가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적 참여, 공동 숙의, 공동 행동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다. 시민은 사적 인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적 사안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말할 뿐 아니라 남의 생각도 들으면서 숙의에 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공동의 당위적 의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발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가꾸어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시민참여와 '우리'라는 공동체의 강조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자아내지만, '우리'를 너무 강조한다는 데에 또한 한계가 있다. 각종 사회경계를 가로지르는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고 초경계적 이익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시민참여가 과연 우리공동체 의식뿐 아니라 각종 사회경계를 뛰어넘는 넓은 공동체 의식과 공적 덕성을 형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맨스브리지(J. Mansbridge)도 우애, 상호 존중, 면대면 접촉을 근간을 삼는 '통합적 민주주의'(unitary democracy) 모델을 제시하며 시민 모두가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소규모 단위에서의 평등한 공적 참여를 통해 공동이익을 향해 합일점을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다(Mansbridge 1994). 그는 통합적 민주주의 모델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는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적대적 민주주의'(adversary democracy)보다 오히려 통합적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면이 많다는 점을 여러 예를 통해 주장한다.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자유주의적 거래, 타협, 다수결은 흔치 않으며, 시민들이 면대면 접촉을 자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상대방에 대

한 감정이입을 하게 되어 동질성을 느끼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어 결국 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맨스브리지의 시각도 바버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론 공감을 자아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사회경계, 특히 국가경계를 가로질러 유효성을 견지하기는 힘들고, 바버에 비해 면대면 직접 접촉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탈경계 시대를 맞아 사회이익들의 연계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공동체주의적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델인 결사체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탈경계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허스트(P. Hirst)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결사체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Hirst 1993). 그의 모델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사체 간의 조정으로 한정되고, 결사체들에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치적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국가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결사체를 지원, 감독하고, 민주적 규범을 세우고, 공동체의 합의된 기준을 제시해 결사체들이 자치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관건은 사회 현안을 가능한 한 많이 분권화해 지방 차원에서 소규모 결사체들이 협동조합, 종업원 지주회사, 협회, 상호부금, 그밖에 지역공동체와 회사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치적, 자율적 기제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허스트의 결사체민주주의 모델은 개인의 자유와 결사체의 공적 의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너무 지방적 소규모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각종 경계가 약해지고 다차원적으로, 특히 지구적으로 사회이익의 초경계적 연계가 심화되는 오늘의 시대환경에 적용시킬 때 원만한 갈등조정과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평화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참여민주주의나 결사체민주주의와 상당 부분 겹치지만 숙의민주주의는 개방적이고 강제되지 않은 숙의를 통해 합의된 판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밀러의 숙의민주주의 모델에서 중요한 가정은 사람들이 좁은 특수이익과 개인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전체의 전반적 공정성과 공동이익을 위해 선호를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Miller 1993). 물론 밀러의 모델이 최종 결정단계에서의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투표는 충분한 숙의가 있은 후 각자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의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최종 결정이 공동선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은 늘어난다(Miller 1993, 76). 숙의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선호 중 명백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있던 것은 버리고, 사회의 도덕률에 전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버릴 수밖에 없고, 좁은 자기이익만 반영해 외견상 명분에 맞지 않는 것도 포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는 숙의를 통해 공동체 일원들에게 집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심어줘 공동 규범, 상호 신뢰를 쌓고 공동선을 향해 이익통합을 시도할 것을 주문한다는 데서 당위적 공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타운미팅이나 의회 위원회 같은 소규모 단위에서의 숙의 노

력도 각종 조작, 조종, 소외, 불평등, 적대감 등 현실적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데(Mansbridge 1974, Mutz 2006), 하물며 탈경계 시대를 맞아 국가수준이나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여러 사회경계를 초월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해 긍정적 효과를 낼지 의문이 따른다. 밀러 스스로 인정하길, 소규모 단체에서 숙의가 가능하다는 경험적 증거를 넓은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Miller 1993, 88). 탈경계 사회조류가 심화되는 복잡한 시대에 조화로운 갈등해소 및 공정한 사회적 결정을 추구하는, 즉 평화를 모색하는 인식적 길잡이가 되기에는 그 한계가 너무 커 보인다.

IV.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담론의 한계

전술했듯이 기존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패러다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적 시각을 찾는 노력이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위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담론'은 탈경계 현상 중 지구화와 관련해 여러 흥미로운 주장을 낳고 있다. 한 예로, 헬드(D. Held)는 기존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전제로 발전되어온 탓에 시대적 유효성에 한계가 왔다고 지적하며 소위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를 제창한다(Held 1995, 2007). 그의 주장은, i) 국가차원의 기존 정치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차원과 세계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민주적 정체(政體, 특히 의회)를 구성해 범세계 연방주의 구조를 만들고, ii) 항구적인 상위의 원칙을 천명하는 헌법주의를 초국가적 차원으로 정립하고, iii) 이를 위해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성격을 벗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를 세계차원으로 확장시킨 당위적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헬드의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 모델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범세계 연방주의 구조를 만들고, 항구적인 상위의 헌법원칙을 지구 차원에서 모색하고, 사람들이 범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기에는 세계의 다양성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Kymlicka 1999). 특히,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초국가적 헌법을 만드는 일이 가능할지, 그리고 과연 바람직한지 논란을 야기한다(Saward 2007, 6). 민주성이라는 당위적 가치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알(R. Dahl)은 초국적 차원의 민주주의 기구는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민주성보다 획일성을 하향적 방식으로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Dahl 1999).

드라이젝(J. Dryzek)은 헬드의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초국가적 정치체는 기존의 국가기구와 유사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구화 시대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융통성을 갖출 수 없다고 비판한다(Dryzek 2000). 그도 지구화 시대에 적합

한 민주주의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보다 덜 공식적이고 덜 권력적인 차원에 주목해 초국가적 시민사회, 즉,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에서의 일상적 대화와 토의에서 추진 동력을 찾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ryzek 2007). 톰슨(D. Thompson)은 국가경계를 가로질러 선거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을지 반문하며 헬드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국가경계를 뛰어넘는 일상적 숙의가 국가경계를 가로지르는 선거나 그 밖의 이익집성 기제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런 만큼 더 적절하다(Thompson 1999). 이런 의미에서 톰슨은 자유주의 관점을 초국적으로 확대하려는 헬드와 달리 드라이젝처럼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하되 그 범위를 초국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해답을 찾으려 한다. 에커슬리(R. Eckersley)도 생태환경 문제에 천착하며 국가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환경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생태환경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한 기제로 숙의민주주의가 유망한 희망을 던진다고 본다(Eckersley 2007).

숙의민주주의에서 지구화 시대의 적절한 모델을 찾는 드라이젝, 톰슨, 에커슬리 등의 노력은 일각에서는 큰 공명을 자아내지만 다른 일각에서 볼 때는 헬드의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 못지않게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톰슨은 국가경계를 가로지르는 숙의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초국적 숙의를 위한 기제로 여러 사회들이 파견하는 대표자들 간의 포럼을 제시하지만, 그 포럼이 너무도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과 포용성(inclusiveness)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제도나 기제를 통해 이룰지 의문을 남긴다. 지구시민사회의 각종 World Social Forum을 관찰해보면 참여자 간의 진정한 숙의를 방해하는 이념적 갈등, 조직상의 이해관계, 정치적 동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Glasius and Timms 2006).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경계를 뛰어넘는 숙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배경을 볼 때 대표성의 한계가 두드러진다.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담론의 또 다른 갈래로, 개인이 국가경계나 집단경계 내로만 제한시킨 자신의 정체성을 지구정체성(global identity)으로 발전시키고 지구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자연스레 갖도록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지구정체성과 지구시민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비록 구체적 사안에 대한 보편적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와 배경과 문화가 다른 '타인'을 배격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지구차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Scholte 1996, Smith 1996). 특히 국가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수많은 NGO들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면 열린 다원주의에 입각한 지구정체성과 지구시민의식이 점차 함양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가 원활히 도모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널리 힘을 얻고 있다(Salamon and Anheir 1997, Rosenau 2007). 그러나 이런 시각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구정체성의 형성이 꼭 만족스런 민주적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평화 모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첫째, 지구정체성은 자칫 다원주의가 아닌 지배적 문화에 의한 획일적 패권주의나 배타주의로 변질되어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수의 의견을 억누르면서도 그 억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 여러 사람이 공동의 지구정체성을 느낀다 해도 당위적 성격의 시민적 덕성을 같이 갖추지 않는 한 내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내가 절대로 옳다는 자기중심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럴 경우, 평화에 수반되는 각종 가치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이 일반적, 추상적 차원에서는 공동의 정체성을 느낄지 몰라도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선 입장 차이를 내며 갈등과 교착에 빠질 수 있다.

이상에서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 담론'이 탈경계 시대의 평화 모색 패러다임을 찾는 데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담론은 지구화, 즉 탈주권국가화에 주안점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는 데 천착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자유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관점을 그대로 지구 차원으로 확장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근원적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자유주의의 한계, 혹은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근원적으로 다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화, 나아가 보다 일반적으로 탈경계 시대조류 속에서 평화 개념을 이끌 이론적 토대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V.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성찰적 민주주의

기존의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가 공히 탈경계 시대환경 속에서 평화 모색의 적절한 이론적 길잡이 역할을 하기 힘들다면 어떠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구딘(Robert Goodin)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실마리를 제공한다(Goodin 2003). 구딘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성찰적 민주주의'(reflective democracy)라고 부르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성찰(reflect)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각과 목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익을 내 마음속에서 성찰하는 내재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딘은 이 성찰의 과정을 '내적 숙의'(deliberation within)라고 칭했다. 내적 숙의를 하려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마음속 상상의 차원에서 그들과 나 사이의 민주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 마음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찰 과정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거래 및 협상을 위한 토론이나 공동체주의의 면대면 숙의와 다르다. 겉으로 표출되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내적 인식 및 사고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남들의 여러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상상력이 필수적이다.

내적 숙의 개념은 그 어원을 볼 때, 공동선을 향해 각자의 인식을 통합시켜가는 과정인 숙의라는 공동체주의적 개념에서 온 것이다. 이 점에서 각자의 절대 권리를 지키고 고정된 선호들을 사회적으로 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 관점과

구분된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가 남들의 입장을 감정이입하듯 헤아리며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들과의 숙의를 거쳐 공동선을 향한 성찰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각자의 이성적 독립성을 가정하므로 자유주의 기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람들의 인식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 구조적으로 편입되고 규정된다는 공동체주의 시각은 구딘의 성찰하는 개인과 그러한 개인의 내적 숙의에 토대를 둔 성찰적 민주주의와 비교해볼 때, 공동선의 모색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에서 구딘의 시각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에 절묘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딘의 '내적 숙의' 개념에 입각한 성찰적 민주주의 모델의 핵심 특징이자 탈경계 시대를 맞아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경계초월적 성격이다. 내적 숙의는 행위주체인 나 혼자 인식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범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숙의를 위해 모든 관련자들이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필요 없고, 그들이 숙의자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면 된다. 자유주의적 이익집성이나 공동체주의적 참여 혹은 숙의 과정의 경우, 사람들의 동기가 설혹 적절하다고 해도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 관점의 특성상 사회적 소외자나 비주류 집단은 배제되기 쉽고 설혹 포함된다 해도 주변적 역할에 그치기 쉽다. 최대 다수에 최대 행복을 주는 이익집성을 하고자 하는 좋은 동기가 있어도 고정된 선호들의 집성을 시도하는 한, 밀러가 말했듯이 최적의 결과를 내지 못하며 소수의 불리함 및 불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공동선을 향해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동기가 아무리 숭고해도 기존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기제로는 충분한 수의 다양한 시민이 적극 참여하기 힘들고 각자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내적 숙의는 내가 남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동선을 향한 성찰적 판단을 하겠다는 동기가 있는 한 나와 다른 영역, 집단,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 그리고 소외 이익이나 소수 의견을 전면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 현 시점의 국외자나 소외자, 소수자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후대 사람들의 이익까지도 내적 숙의로써 고려해줄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의 이익뿐 아니라 생태환경적 이익까지 내적 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간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내적 숙의의 장점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제(諸)영역, 제(諸)집단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경계를 가로질러 수많은 이익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수많은 상대방의 입장과 이익들을 헤아릴 수 있게 하므로 내적 숙의는 탈경계 시대에 각종 갈등을 흡수하고 문제를 풀며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숙의의 매력은 특히 국가경계의 약화, 즉 지구화와 관련해서 부각된다. 지구화가 심화되면서 참정권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상주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고 동시에 참정권을 지닌 국민이 외국에 상주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정되는 수많은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받지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외 거주 내국인도 해당국의 정책에 영향 받지만 그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해외부재자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국의 정치체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식적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만약 정치인이나 일반시민이 내적 숙의를 한다면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각자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

사회경계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내적 숙의에서 성찰될 수 있듯이, 사회경계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그 경계 안팎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입장과 이익을 내적 숙의로써 성찰할 수 있다. 이 점이 탈경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환경에 내적 숙의 개념이 조응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일 것이다. 즉, 구딘의 내적 숙의가 탈경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이 각자 위치한 고유한 사회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공동체주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사람들의 선호가 개별적으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정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적 숙의는 개인의 신중하고 성찰적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적 숙의는 공동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입각한다. 후자는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공적 토의를 통해 묶어 보다 동질적이고 일관된 전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전자는 반드시 이익의 동질적 통합이나 동일한 정체성의 형성을 수반하지는 않고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수용을 수반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숙의는 자유주의 관점처럼 "선호 존중적"이지만,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을 균형있게 성찰하며 필요할 경우 남의 입장에 따라 내 생각을 전환하기도 하며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구별된다.

구딘은 성찰적 내적 숙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는 무엇보다 문화권장 정책을 통해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것을 제안한다. 영화, 책, TV 프로그램, 그 밖의 매스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남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엉클톰스캐빈>이 미국의 백인으로 하여금 흑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고 입장을 긍정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듯이, 각종 사회경계 밖의 여러 사람과 집단,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의 문화체험을 통해 탈경계 시대에 조응하는 내적 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딘은 또한 남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이질적인 사람들과 직접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다문화정책과 주거·교육·교통 정책을 제안한다. 사회경계를 가로지르는 어울림은 내부에서의 어울림에 비해 훨씬 어렵지만 이러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구딘은 외부 자문 절차의 확대를 강조한다. 가능한 한 많은 관련자들의 자문을 받을수록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내적 숙의가 가능할 것이다. 탈경계 시대환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외부 자문은 각종 다양한 사회이익을 망라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경계 밖의 혹은 국가경계에 걸쳐있는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내적 숙의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성찰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최종 결정의 기제는 물론 아니다. 구딘은 내적 숙의를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보완으로 생각하며 관련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최종 결정은 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을 인정한다. 내적 숙의는 최종 결정에 필요한 당사자들 간의 외적 대화나 공적 참여도 아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적 숙의는 공적 참여, 외적 대화, 그리고 집합적 투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것이 충실할수록 공적 참여나 외적 대화나 최종 결정 기제가 다소 덜 완전해도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내적 숙의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성찰적 자세를 우리에게 심어준다.

구딘의 이론은 각 영역에서 탈경계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평화 모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망해 보인다. 마음속으로 남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공동선을 향해 내 생각을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인 내적 숙의는 정치가는 물론 관료, 이익단체 대변자, 언론인, 그리고 모든 일반시민이 지향해야 할 인식상의 길잡이라고 하겠다. 많은 사람이 내적 숙의를 통한 성찰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갈등해소 및 사회적 결정을 이끄는 이론적 기제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각종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공히 직면하게 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 평화 개념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안주할 경우 이익조정 실패, 인민주권 원칙의 훼손 등 위기증후군을 해소하지 못하며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또한 공동체주의 패러다임도 사회관계가 각종 경계를 넘어 복잡하게 얽히고 확장되는 시대환경 속에서 평화 모색의 이론적 나침반으로서 적실성을 찾기에는 너무 경계지향적이다. 반면, 탈경계 시대를 맞아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 개념을 실천의 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인식상의 실마리로 구딘의 내적 숙의가 유용해 보인다. 내적 숙의가 우리의 사고에서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성찰적 민주주의가 이론적 토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탈경계의 전환기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조화롭게 공동선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실, 탈경계 조류가 심화될수록, 그래서 온갖 다양한 이익들이 뒤섞이며 혼란이 가중될수록, 성찰적인 내적 숙의는 평화 모색의 기제로서 그 존재가치를 높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지구화를 비롯해 여러 수준, 부문에서의 탈경계화 조류는 기존 인식 패러다임들의 시대적실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계약론적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 민주적 동의, 민심 중시 등을 충실히 실천하기에는 사회경계가 실제상 너무 불분명해졌다. 공리론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익집성의 메커니즘 역시 초경계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국가중심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는 국가패러다임의 반명제인 지구화, 지방화 등 국가경계를 낮추는 현상들로 인해 더욱 더 소생하기 힘들게 되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근래 공동체주의가 공명을 자아내고 있지만, 소속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인간행동을 규정하고 추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경계지

향적이고 소규모 단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경계초월적 시대환경에 잘 맞는 것 같지 않다. 현대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둔 참여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면대면 숙의민주주의 등의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탈경계 시대에 우리의 인식을 이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기존 이론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 글은 구딘의 '내적 숙의' 개념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구딘은 숙의라는 공동체주의적 개념에 착안했지만, 각 사람이 남들의 입장을 감정이입하듯 헤아리며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들과의 숙의를 거쳐 각자 성찰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이성적 독자성을 상정한 자유주의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구딘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국가경계를 포함한 각종 사회경계를 초월해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어려운 공동결정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마음속 상상의 세계에서 남들과 내적 숙의를 하면서 각종 경계를 뛰어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상정하는 구딘의 시각은 탈경계 시대 평화 모색을 위한 이론적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독립적, 합리적 개인인 자유주의적 인간이나 사회맥락에 편입되어 자아를 찾는 공동체주의적 인간을 뛰어넘어 내적 숙의를 통해 남들을 배려하되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을 하는 성찰적 인간을 당위적 모델로 삼을 때, 탈경계 시대에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평화 개념의 정립 및 실천이라는 과제를 위한 이론적 관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숙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모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실제상 당위적 가치와 기준, 명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잦다는 경험적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다(Goodin 2003, 230). 또한 전술했듯이 구딘이 지적한 문화정책 등 몇몇 방안을 잘 실천함으로써 내적 숙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설혹 만족할 만큼의 수준에서 내적 숙의 개념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해도, 당위적 목표로서 평화 모색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추동력을 가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내적 숙의가 하나의 유망한 실마리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내적 숙의를 거쳐 평화 개념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시민사회 공동의 향후 과제로 돌린다. 또한, 내적 숙의와 성찰적 민주주의라는 다분히 절충적인 개념 및 관점이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처럼 보다 선명하고 일관된 논리에 입각한 모델에 비해 오늘의 시대환경에서 평화의 모색을 위해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적 숙의를 핵심요소로 하는 성찰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평화라는 다의적 개념과의 연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임혁백. 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 리서치.

Archibugi, Daniele, David Held, and Martin Köhler. eds. 1998.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rendt, Hannah. 1984. "The Revolutionary Tradition and Its Lost Treasure." in Michael J. Sandel. ed. *Liberalism and Its Critic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Barber, Benjamin. 1994. "Strong Democracy."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Beetham, David. 1993. "Liberal Democracy and the Limits and Democratization." in David Held. ed. *Prospects for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Berlin, Isaiah. 1984. "Two Concepts of Liberty." in Michael J. Sandel. ed. *Liberalism and Its Critic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Budge, Ian. 1993. "Direct Democracy: Setting Appropriate Terms of Debate." in David Held. ed. *Prospects for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Cohen, Edward S. 2001. *The Politics of Glob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Dahl, Robert. 1999. "C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 Democratic? A Skeptic's View." in I. Shapiro, and C. Hacker-Cordon. eds. *Democracy's Ed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etrich, Wolfgang, 2006. "A Call for Many Peaces." In Wolfgang Dietrich et al. *Key Texts of Peace Studies*. Vienna: LIT Verlag.

Dobson, Andrew. 2007.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in Michael Saward. ed. *Democracy: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London: Routledge.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ckersley, Robyn. 2007. "Deliberative Democracy, Ecological Representation and Risk: Towards a Democracy of the Affected." in Michael Saward. ed. *Democracy: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London: Routledge.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______.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Thousand Oaks.

Glasius, Marlies and Jill Timms, "The Role of Social Forums in Global Civil Society: Radical Beacon or Strategic Infrastructure?," Global *Civil Society 2005/6* (London: SAGE, 2006), pp. 190 238.

Goodin, Robert E. 2003. *Reflective Democrac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Held, David.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7. "The Changing Contours of Political Community: Rethinking Democrac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Michael Saward. ed. *Democracy: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London: Routledge.

Held, Davi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an Perraton. 1999.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UK: Polity Press.

Hirst, Paul. 1993. "Associational Democracy." in David Held. ed. *Prospects for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Kymlicka, W. 1999. "Citizenship in an Era of Globalization: Commentary on Held." in I. Shapiro, and C. Hacker-Cordon. eds. *Democracy's Ed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mbourne, Wendy. 2004. "Post-Conflict Peace-building: Meeting Human Needs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Peace, Conflict and Development*. 4 (April).

MacIntyre, Alasdair. 1984. "The Virtues, the Unity of a Human Life, and the Concept of a Tradition." in Michael J. Sandel. ed. *Liberalism and Its Critic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Mansbridge, Jane. 1974. "Town Meeting Democracy." in Peter Collier. ed. *Dilemmas of Democrac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_______. 1994. "Unitary Democracy."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1986.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earch for Appropriate Institutions." *Journal of Public Policy*. 6, 4.

Miller, David. 1993.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tization." in David Held. ed. *Prospects for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utz, Diana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sbet, Robert. 1994. "The Problem of Community."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Oakeshott, Machael. 1984. "Political Education." in Michael J. Sandel. ed. *Liberalism and Its Critic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Oldenquist, Andrew. 1994. "Group Egoism."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Rosenau, James N. 2007. "Governance and Democracy in a Globalizing World." in Michael Saward. ed. *Democracy: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London: Routledge.

Saward, Michael. 2007. "Reconstructing Democracy: Current Thinking and New Directions." in Michael Saward. ed. *Democracy: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London: Routledge.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7. "The Civil Society Sector." *Society* January/February.

Scholte, Jan Aart. 1996. "Globalisation and Collective Identities." in Jill Krause and Neil Renwick. eds. *Ident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Press.

Smith, Roy. 1996. "Citizenship: Identification and the Global." in Jill Krause and Neil Renwick. eds. *Ident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Press.

Sunstein, Cass. 1994. "Preferences and Politics."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Taylor, Charles. 1994. "The Modern Identity."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Thompson, Dennis. 1999. "Democratic Theory and Global Society."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7.

Wolin, Sheldon. 1994. "Contract and Birthright." in Markate Daly. ed. *Communitarianism: A New Public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평화학 및 평화운동의 국제적 동향 : 시사점과 과제

홍기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I. 서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상에 전쟁은 간단없이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평화학(peace studies)이요 다른 하나는 평화운동(peace movement)이다. 평화학은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포함하는 학제간 영역(interdisciplinary field)으로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을 포함한다. 평화운동은 전쟁과 폭력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회행동을 의미한다.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평화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때때로 긴장을 유발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하여 왔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학문적 연구과제가 달라졌고 운동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평화학 연구의 선구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학문과 운동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접근(approach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크게 세 가지의 변화패턴을 제시하고 있다.[1] 그는 우선 평화를 "감정이입, 비폭력, 창조성을 가지고 갈등을 다루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갈등을 태도(attitudes), 행위(behaviour), 모순(contradiction)의 결합체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제 2차 세계대전 까지를 제 1세대로 보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옹호(advocating), 시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운동, 전쟁의 철폐, 좋은 정부의 세계적 확산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제 2세대로 보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평화교육과 평화언론의 확대, 비폭력 투쟁,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등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냉전이후를 제 3세대로 보고 이 시기의 특징으로 평화문화의 증진, 기본적 인간욕구(basic human needs)의 만족, 평화구조(peace structures)의 창출 등을 들었다. 갈퉁의 구분이 시사하는 바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점차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쟁의 부재를 넘어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완화하여 기본적 인간욕구의 충족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평화학 연구와 평화운동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평화학 연구의 동향은 국제평화연구학회(International Peach Research Association: IPRA)의 발전경로를 중심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요구되는 평화학의 연구방향과 평화운동의 전개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평화학의 국제적 동향

1. 평화학의 태동

현대적 의미의 평화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전쟁 중 일어났던 나찌의 잔혹한 유대인 학살과 원자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의 등장 등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평화담론과 평화운동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 주었고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전후 동·서양진영간 냉전체제가 확립되면서 미·소 간 핵 경쟁이 가속화 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셀(Bertrand Russell)과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1957년 7월 캐나다의 퍼그워시(Pugwash)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2]

이와 같은 움직임에 자극받은 평화학자들은 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구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1959년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평화연구소(Peach Research Institute Oslo: PRIO)가 설립되었고 1964년 이후 *Journal of Peach Research*라는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1961년에는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는 전쟁연구소(Polemology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스웨덴은 1966년에 150년간 평화가 지속된 것을 기념하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를 설립하고 군비와 군축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핀란드가 탐페레 평화연구소(Tampere Peace Research)를 설립하였다. 미국에서도 또한 1957년 보울딩(Kenneth Boulding)과 라포포드(Annatol Repoport)의 주도로 미시건대학에서 갈등해결연구소가 창설되고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1963년에 창립된 미국평화연구협회(US Conference on Peace Research and History)는 *Peace and Change*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평화학자들의 국제적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 사회학자 엘리스 보울딩(Elise Boulding)이었다. 그녀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이 1962년 설립한 평화연구에 관한 국제협력위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on Peace Research) 위원장을 맡으

2)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http://www.pugwash.org/about/conference.htm 참조.

면서 국제평화연구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평화연구의 국제적 조직화를 시도하였다.[3] 1963년 스위스에서 퀘이커교도의 후원으로 국제평화연구회의가 개최되었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64년 네덜란드 그로닝겐에 본부를 둔 국제평화연구학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4]

2. 평화학의 시대적 변천

1960년대 평화연구의 중심적인 주제는 당연 핵무기 경쟁이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촉발된 미·소간의 핵무기 경쟁은 평화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핵심적 연구과제였다. 평화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것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였던 많은 연구자들이 물리학 혹은 수학자들의 연구방법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대표적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 또한 수학자 출신으로 평화학을 과학(science)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치킨게임(chicken game)이나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게임모델이 평화연구의 방법론으로 자주 적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 핵군축 위주의 평화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저개발국가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비록 핵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아, 가난,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간디의 평화사상을 잇고 있는 인도의 학자들이 주도하였는데 평화학계에 '남북문제'(south-north questions)의 심각성을 제기한 것이었다.[5]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갈퉁은 평화개념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하였고 폭력의 개념도 직접적 폭력(direct violence)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로 구분하였다.[6] 이와 같은 그의 평화개념 정의는 향후 평화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평화연구의 중심적 이슈는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 폭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있기 전 까지는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가 간에 존재하는 격차는 개발단계의 시간적 차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점차 저개발국가들의 학자들이 많은 저개발국가의 부(富)가 부당하게 개발국가들에 의해 착취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기술의 형태로 저개발국에게 제공

---

3) 본 논문에서 IPRA의 전개과정에 대한 내용은 Katsuya Kodama, "The IPRA Path," IPRA web page, http://www.iprasydney2010.org/About_IPRA.html (2009년 11월 11일 검색)을 주로 참조하였음.

4) IPRA는 90개국 1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평화연구학회이다.

5) 대표적인 학자로는 바라나시 (Varanasi)에 있는 간디연구소(Gandhian Institute of Studies) 소장인 다스굽타(Sugata Dasgupta)가 있다. 그는 "비평화, 나쁜 개발"(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 1968)라는 책에서 'Peacelessnes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제 3세계적 삶의 정황을 표현했다. 그는 비평화의 구성요소로서 빈곤, 기아, 영양실조 등을 들면서 이러한 비평화적 구성요소를 제거하고 위생적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평화실현의 길이자 제 3세계와 개발도상국의 평화연구의 과제라 주장하였다.

6) Johan Galtung, *Peace: Research·Education·Action: Essay in Peace Research Vol. One* (Copenhagen: Christian Ejlers, 1975), pp. 109-134.

되는 원조나 민주주의나 자유경쟁과 같은 서구의 개념들이 저개발국의 빈곤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갈파하였다. 이 시기에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존재하는 국제적 착취구조를 어떻게 타파하는가 하는 문제가 평화학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과 같은 시스템이론이 평화연구 방법론으로 주로 이용되었다.[7]

한편 IPRA의 평화교육 분과를 중심으로 정치한 이론적 분석과 통계적 분석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 평화학 연구의 결과가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교육, 양성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전반부에 새로운 평화운동이 유럽, 북미,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 평화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즉 영국의 핵군축위원회(The Committee for Nuclear Disarmament), 서독의 녹색당 등이 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IPRA내에도 평화운동 분과가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평화운동가들이 IPRA 회의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 것이 평화학연구와 평화교육 간의 관계를 재설정 하는 것이었다. 또한 평화학이 분화를 거듭하면서 평화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간에 일어났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 폭격을 감행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두고 평화학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대다수의 평화학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989년-1991년 엘리스 보울딩이 IPRA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평화학 분과는 16개로 늘어났다. 특히 평화교육분과의 공로를 인정받아 IPRA는 1989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하였다.[8]

1990년대 초반 동·서 냉전구조가 해체됨에 따라 평화학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평화가 도래하였음으로 평화학의 사명 또한 끝났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우선 이념적 갈등을 대체한 것은 인종·민족간 갈등의 분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20만명의 사상자와 2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함으로써 평화학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화는 국제NGO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평화학도 새로운 역할과 방법론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9]

이러한 배경 하에서 평화학자들은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민주적 국제사회

---

7) 시스템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가 있다.

8) 이후 2000년과 2001년에 IPRA의 회원인 Swee-Hin과 Betty Reardon이 각각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하였다.

9) 1992년 7월 27일-31일,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제 14차 IPRA 회의가 “Challenges of a Changing Global Order”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의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0] 여기에는 Pax UN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와[11] 유엔의 내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세계시민들이 유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권국가간의 국제정치에서 세계시민간의 국제정치로 극적 전환을 모색하는 학자도 있었다.[12] NGO의 참여를 통한 유엔의 민주화는 유엔개혁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NGO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평화문화의 확산이다.[13] 여기에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시민들이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 평화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각된 것은 평화문화의 확산이 평화연구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평화학의 주제가 세분화,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통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평화학의 다양한 주제를 평화문화의 확산이라는 중심목표를 위해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14]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자메일과 인터넷이 평화학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있는 평화학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평화학 연구가 가능해 졌다. IPRA는 하와이 대학교의 조지 켄트(George Kent)의 주도로 “List-Serve”라는 전자메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5]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가의 학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남·북간의 정보격차를 문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등장한 통신수단이 평화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16]

20세기말 탈냉전의 세기사적 변화는 평화의 21세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불러일으켰으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의 충격 속에 시작한 21세기는 테러와 반테러전의 악순환 속에서 냉전의 세기와는 다른 갈등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학은 전 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전 세계가 테러리즘과 반 테러리즘으로 양분화 되면서 “이에는 이” “폭력에는 폭력” 논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문명간의 충돌”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였

---

10) 1991년 열린 제 10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New World Order: The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와 1992년에 열린 제 11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도 이러한 경향을 대변한다.

11) 대표적인 학자로 조영식 박사를 들 수 있다. 그는 1984년 세계대학총장회의(IAUP)에서 “Pax UN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유엔에 이론을 제공하였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유럽 30여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스웨덴에 모여 개최하였던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서 Pax UN만이 세계평화유지의 유일한 방법임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추인하여 Pax UN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게 하였다.

12) 대표적인 학자로는 캐나다의 평화학자 한나 뉴콤베(Hanna Newcombe)가 있다.

13) 1995년 12월 유엔총회 제 50차 회의는 “인권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10년계획: 평화의 문화”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평화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pp. 293-316 참조.

14) 1994년 10월 30일-11월 4일, 말타의 발레타에서 “Intercultural Conflicts: The Roles of Peace Research and Education”라는 주제로 열린 제 15차 IPRA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이론 연구분과를 설치하였다.

15) Katsuya Kodama, op. cit., p. 20.

16) 이와 같은 주제는 1996년 7월 8일-12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스밴(Brisbane)에서 개최된 제 16차 IPRA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되었다.

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은 5,000억 달러를 상위하는 군비를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2년 미·소간에 맺은 ABM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탈퇴하면서 일방주의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유엔을 무력화 시켰다.

평화학자들은 우선 9.11과 같은 국제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탐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서 제기된 테러리즘의 근원적 원인으로 미국의 차별적 외교정책, 미국으로 상징되는 근대화에 대한 저개발국가들의 맹목적적 증오, 세계화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 종교적 근본주의, 거버넌스의 실패, 환경적 요인 등을 들고 있다.[17] 평화학자들은 이와 같은 원인의 중심에는 상대적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강한 자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내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평화학자들이 새롭게 주목한 개념이 이미 1990년대에 등장했던 인간욕구이론(human needs theory)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론이다.[18] 인간욕구이론은 욕구자체가 인간의 생래적인 조건이며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인간욕구이론은 인간욕구가 생리적으로 혹은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성향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19]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게 충족될 경우 인간의 개인적인 발전은 왜곡되고 손상되며 인격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될 때 사회는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욕구이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욕구의 만족이 개인적 인간개발과 조화로운 사회의 형성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인간욕구 개념은 개발(development)과 안보(security)라는 두 중심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간개발이 가능해 지고 인간개발은 곧 안보의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20]

한편 '인간안보' 개념을 처음 제시한 UNDP의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는 과거의 안보개념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추구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관심을 등한시하였다고 비판하고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영위되는 일상생활의 갑작스런 중단으로부터의 보호"

17) 토론토 대학의 평화와 갈등연구소 소장인 토마스 호머-딕슨(Thomas Homer-Dixon)은 경작자나 물부족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가 농민들을 도시로 유입시키고 이들의 폭력적 테러에 쉽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http://www.wfs.org/mmdixon.htm. (검색일 2009년 11월 13일).

18) 1998년 6월 23일-26일 남아공 더반 (Durban)에서 열렸던 제 17차 IPRA는 "Meeting Human Needs in a Cooperative World"라는 주제로 열렸고 2000년 8월 5일-9일 핀란드 탐페레(Tampere)에서 열렸던 제 18차 IPRA는 "Challenges for Peace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A Dialogue of Civilization"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평화이론 분과는 평화와 안보의 개념을 다루면서 인간안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19) Dennis J. D. Sandole, "The Biological Basis of Needs in World Society: The Ultimate Micro-Macro Nexus," in John W. Burton, eds., *Conflict: Human Needs Theory* (Palgrave: Macmillan, 1990), p. 64.

20) 인간욕구이론과 인간안보론의 결합을 시도한 연구로는 홍기준, "인간중심주의적 안보개념의 모색," 『안보학술논집』 2004년, 제 15집, 제2호 참조.

가 인간안보의 주요 내용이라고 정의하였다.21) 인간안보론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적 배경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기대수준의 변화'와 '냉전 이후의 국제관계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세계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세계화는 정보화와 병행하여 가속화되었고 타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확장은 동시에 일반 개인들의 자신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수준이 만족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개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개인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졌다. 이러한 현상은 저개발국가일수록 더욱 현저하였다. 이와 같이 급속한 세계화 현상의 부작용에 노출된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수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개인차원의 복지가 안보의 중요 의제로 부각되었다.22)

한편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새로운 안보이슈가 부각되었다.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진영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가간의 갈등보다는 국가내의 갈등이 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수단,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보스니아, 리베리아, 르완다, 자이레, 체첸, 코소보,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콜롬비아 등과 같은 저개발, 빈곤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이 발생한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 폭력, 기근, 질병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자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접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의 거시적 변화는 냉전시대 외교정책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경제개발'과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인간안보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평화학과 안보학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학술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한편 반테러 전쟁이 계속되었던 2000년대 초·중반에 평화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그들이 개발한 개념과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과연 평화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비폭력 개념이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북한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23)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평화학계를 관통했던 핵심 주제는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시대에 등장하는 갈등의 양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화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였다.24) 갈퉁은 이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평화사업(peace work)이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되어야 하며 힘을 중심

---

2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2.

22) 홍기준, op. cit., p. 166.

23) 2002년 7월 1일-5일, 제 19차 IPRA 회의가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Social Justice: New Challenges for Peace Research"라는 주제로 한국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렸다. 또한 2004년 7월 5일-9일에는 제 20차 IPRA 회의가 "Peace and Conflict in a Time of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헝가리 소프론(Sopron)에서 열렸다. 이 두 회의를 관통하는 주제가 평화학의 현실적용성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24) 2006년 6월 29일-7월 3일 캐나다 캘거리(Calgary)에서 열렸던 제 21차 IPRA 회의의 주제는 "Pattern of Conflict, Path to Peace"였으며, 2008년 7월 15일-19일, 벨기에 루벤(Leuven)에서 열렸던 제 22차 IPRA 회의의 주제는 "Building Sustainable Futures: Enacting Peace and Development"였다.

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상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적 대립을 초월(transcend)하여야 한다고 갈파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화전문가는 첫째, 정부와 비정부기구를 모두 고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폭력을 배격하되 이상주의의 가슴과 현실주의의 머리를 결합하여야 한다. 셋째, 이론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경험주의와 데이터와 가치를 연결하는 비판주의를 지적행위의 기본으로 삼되 가치와 이론을 연결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전문가는 중재와 조정과 같은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갈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초월접근적 방법론(TRANSCEND approach)을 제시하였다. 즉 제 1단계: 모든 당사자들을 일대일로 만난다. 제 2단계: 창조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이입적 대화를 시도한다. 제 3단계: 초월적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정당한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현실을 창출한다. 제 4단계: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취한다. 이것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첫 단계부터 시작한다.[25] 갈퉁은 각 영역에서 전문화가 심화되는 세계화시대에 국경뿐만 아니라 남녀성별, 세대, 인종과 민족, 계급, 환경 등 인간사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평화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26] 그는 또한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는 평화를 통한 안보가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주장해온 레이클러(Luc Reychler)는[27] 제 3세대 평화학의 특징으로 첫째, 그간의 갈등예방 및 평화구축 행위가 서구적 이론과 이해에 치우쳤고, 둘째,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셋째, 연구자, 활동가, 정책결정자 사이에 보다 효과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넷째, 세계시민권은 더 이상 은유(metaphor)가 아니며 필요불가결한 요구사항이라고 볼 때 국경을 초월하는 다층적 노력을 견인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는 결국 권력관계에 귀착된다고 볼 때 케네스 보울딩(Kenneth Boulding)의 분류인 강제적 권력(coercive power), 시장권력(market power), 통합권력(integrative power) 중 강제적 권력이 아닌 시장권력과 통합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미래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갈파하였다.[28]

위와 같은 맥락에서 평화학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학과, 평화교육, 그리고 평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평화전문가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25) Johan Galtung, "What does professionalism mean in peace research?," 2006년 7월 캐나다 캘거리 제 21차 IPRA 회의 기조연설.

26)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op. cit.*, 참조.

27) 지속가능한 평화란 육체적, 구조적 폭력이 없는 사회로 그 시스템이 내외적 정당성과 사회구성원에 의해 지지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Sandra Cheldelin, Daniel Druckman and Larissa Fast, eds., *Conflict: From Analisis to Intervention* (London: Continuum, 2003), p. 279.

28) Luc Reychler, "Building sustainable futures: Peace research-an in-convenient field of study," 2008년 7월 15일 벨기에 루벤 제 22차 IPRA 회의 개막연설.

것이다.[29]

3. 평화운동의 국제적 동향

평화운동은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해 혹은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의미한다. 평화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평화운동의 범주도 확대되었다. 사실상 모든 NGO활동이 평화운동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이런 의미에서 평화운동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지면의 제약 상 가능하지도 않고 유의미하지도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갈퉁의 평화개념, 즉 전쟁부재, 평화회복, 평화유지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의 보편적 유지를 촉진시키는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경제조건을 나타내는 적극적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30] 이런 의미에서 평화운동은 반전운동과 구호·개발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냉전시대 평화운동은 주로 핵무기의 군축과 반전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7년 미국에서는 올바른 핵정책위원회(Committee for a Sane Nuclear Policy, SANE)가 결성되었고, 1958년에는 영국 핵군축운동(Brit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이 생겼다. 1959년에는 가나에서 아크라 군축회의(Accra Assembly for Disarmament)가 열렸고 1967년에는 라틴아메리카 24개국을 비핵지대로 규정하는 트라텔롤코 조약(Treaty of Tlatelolco)이 체결되었다. 1980년 미국에서 시작된 핵동결 캠페인(Nuclear Weapons Freeze Campaign)은 1982년 백만명이 운집한 집회를 열만큼 성공적이었다.[31] 유럽에서도 1980년 나토의 신미사일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로 유럽핵군축(European Nuclear Disarmament: END)이 조직되어 시위가 유럽전역에 퍼졌다. 1985년 남태평양에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반핵운동은 10개국이 서명한 라라통가 조약(Treaty of Raratonga)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1965년에서 1973년까지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반전운동으로는 미국에서 전개된 반 베트남전 운동을 들 수 있다. 60년대를 휩쓸었던 인권운동의 여파는 1965년 미국의 북 베트남 폭격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반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베트남 전쟁의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2]

아시아에 있어서 반전운동은 일본에 의해 주도되었다. 일본의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1955년 반 원자·수소폭탄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를 개최하여 핵무기 반대운동을 하다 점차 반전운동으로 보폭을

---

29) 이와 같은 의미에서 2010년 7월 6일-10일, "Communicating Peac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 23차 IPRA 회의는 의미가 있다.

30) 이광수,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연대의 전망," 『시민운동 현장』, 2005년.

31) 핵동결캠페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David Adames, "The American Peace Movements," http://www.culture-of-peace.info/apm/chapter6-15.html (검색일:2009년 11월 18일).

32) 미국의 반전운동에 대해서는 Mark Barringer, "The Anti-Wa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hht://www.english.illinois.edu/maps/vietnam/abtiwar.html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넓혀갔다.[33]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평화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발생한 민족분규와 분리독립투쟁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구호활동이 평화운동의 중심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인권, 환경과 개발, 기아, 여성 및 아동, 마약과 범죄 등의 문제가 크게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들 문제는 개별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 이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국가가 아닌 대안으로 NGO가 떠오르게 되었다. 또 다른 환경적 변화로는 인터넷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공동의 가치와 목적에 기반을 둔 초국가공동체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이다.[34]

1990년대 후반에 평화운동은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의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반세계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반세계화운동과 평화운동이 접목되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세계화가 군사적 세계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많은 저항을 부르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군사주의적 기제들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는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집단간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다시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고, 선진산업국가들이 산업을 후진국에 이전하고 자신들은 하이테크산업 같은 군수산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35]

이와 같이 반세계화운동이 평화운동과 접목되는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에 운집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제 3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는 2001년 9월 11일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제테러와 함께 2000년대 평화운동의 방향을 결정지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반세계화운동과 평화운동의 접목은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이 발족되면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모토를 가지고 2001년 1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발족된 WSF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같은 시기에 개최함으로써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즉 WEF가 전 세계적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지구적 경제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의인 반면에 WSF는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NGO, 사회운동 세력들의 경험

---

33) 일본의 평화운동에 관해서는 Kazumi Mizumoto, “New Tasks for the Peace Movement in Hiroshima: Sixty Years after the Atomic Bombing,” *Hiroshima Research News*, Vol. 7, No. 2, November 2004.

34) 이광수, op. cit., p. 433.

35) 조희연,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시민과 과제』 제5호/상반기, 2004, pp. 15-18.

을 공유하고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브라질의 WSF에 참가한 131개국, 6만 8천명의 참가자들은 "사회운동의 목소리, 신자유주의,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라는 최종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반전평화운동의 계기를 만들었다. 2003년 1월 1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WSF에서는 전지구적반전운동총회(Global Anti-War Assembly)가 회의를 가졌고, 3월 20일 전 세계시민들이 이라크 점령종식을 위한 반전운동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36] 이후에도 레바논, 인도 등에서 대규모 반전캠페인이 전개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계반전운동을 주도했던 각국의 반전시민단체들이 모여 향후 반전운동의 전력을 논의하여 '자카르타평화합의'(Jakarta Peace Consensus)를 채택하였다.[37] 이 합의문은 이라크전쟁을 불법침공으로 규정하고 점령군의 즉각 철수, 이라크의 오일이 재건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유엔이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 인도주의적 원조는 점령국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38] 또한 2003년 9월에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WTO 제 5차 각료회의 또한 반세계화운동과 반전운동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낸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2004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과 병행하여 열린 아시아유럽인민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은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인간안보를 위한 인민행동"이라는 큰 주제 하에 '평화와 안보' '경제·사회안보' '민주화와 인민의 행동'이라는 소주제의 회의가 열렸다. 특히 '평화와 안보' 분과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분쟁해결, 테러·반테러 그리고 인민의 대응, 서로 다른 문명·문화·종교의 대화, 평화운동, 대량살상무기, 군사주의의 등장과 인민의 대응에 관하여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06년 9월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경제안보, 사회적 권리, 인간안보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핀란드 최대의 NGO회의가 열렸고, 2008년 10월에는 북경에서 1995 NGO여성대회 이래 최대 규모의 NGO회의인 제 7차 아시아유럽인민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40개국 500여명이 참석하여 평화와 안보, 사회와 경제적 권리, 환경정의, 참여민주주의, 인권 등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하였다.[39]

2009년 5월에 경희대학교와 유엔 공동주체로 한국 서울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던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WCF)에서는 지구정의를 위한 시민가치, 글로벌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기후변화 등 세계문

---

36) 이 회의에는 영국의 전쟁저지연합, 미국의 평화정의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전연합, 아시아의 아시아평화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반전운동단체들이 참가하였다.

37) Jakarta Peace Consensus의 원문은 www.focusweb.org 참조.

38) 이라크에 점령감시소(Occupation Watch Center)설치, 이라크에 국제인민전범재판소 설치, 국제적 반 미군기지 캠페인 실시, 바그다드 국제회의, 2004년 뭄바이 WSF에서 반전총회 개최, 반 부시캠페인 개최 등이다. Herbert Docena, "Jakarta Peace Consensus Update: Where is the Antiwar Movement?," Foreign Policy In Focus, September 11, 2003, http://www.fpif.org/fpiftxt/2713 (검색일: 2009년 11월 21일).

39) 제 7차 아시아유럽인민포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Tina Ebro and Maris dela Cruz, "Highlights of the Seventh Asia-Europe People's Forum" 참조, http://www.alterinter.org/article3220.html (검색일: 2009년 11월 21일).

제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회의도 새로운 평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평화운동은 소극적의미의 평화와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결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반전과 반세계화 운동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운동단체들이 국제적 연대를 구성함으로써 대규모의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운동의 질적, 양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는 평화와 정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론적 자각과,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주체간의 소통과 연대를 가능케 한 기술적 수단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평화운동이 등장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9.11 이후 미국의 대 테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다자주의적 대응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실로 9.11이라는 사건이 의도치 않게 야기한 역사적 우연성(historic contingency)의 개입이라 아니할 수 없다.

III. 결론: 평화학과 평화운동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

평화학은 반세기에 걸친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학은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흡수하면서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평화학은 학문의 특성상 중립적 논리보다는 가치 지향적 경향이 있었으며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의 개념은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를 계속하고 있다. 갈퉁은 평화개념을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구분 역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 폭력이 억압(oppression)을 의미한다면 마치 선·악의 구별과 같은 또 다른 경계를 개념적으로 구분 짓는 한계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평화개념의 정립은 여전히 평화학의 과제로 남아있다.

평화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지구상 유토피아의 건설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는 일이다.[40] 이것은 갈퉁이 제시한 초월주의적 접근법과 레이클러가 강조한 현장에 입각한 평화지식의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평화학자는 폭력의 원인이 되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학이 경계해야 할 것은 칸트식의 이상주의적 세계평화론이다. 세계평

40) Gregory H. Mason, "Peace Studies in the Next Half-Century," *Peace Review, Vol.* 14, No. 1 (2002), pp. 15-19.

화론에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는 단일적 논리구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한 평화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계평화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폭력을 야기한다. '세계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대테러전쟁이 결국 구조적 폭력을 항구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일어났다는 자각이 평화와 정의를 결합하는 새로운 평화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위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평화개념이 서구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는 레이클러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라 평가한다. 한편 평화학이 좀 더 객관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중립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갈등의 어느 한 당사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41]

평화학이 단순히 평화에 관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의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평화학연구에서 창출된 지식은 평화학자 뿐만 아니라 평화운동가와 평화정책가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평화학에 의해 창출된 지식은 평화교육을 통하여 평화운동가와 평화정책가에 전수되어야 하고 실행을 통하여 얻어진 교훈은 피드백과정을 거쳐 평화학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평화사업(peace work)의 4대 분야인 평화학연구, 평화교육, 평화운동, 평화정책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평화문화를 창출할 때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추진되는 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자각이 증대할 것이며 이것은 평화운동에 지속적으로 투영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평화와 정의가 결합된 대규모의 평화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분출되는 현재의 운동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슈가 분절화되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규모의 시위는 미디어의 관심을 유발하여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구조적 폭력을 완화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슈별 국제연대를 통하여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운동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새로운 평화학과 평화운둥의 패러다임이 동북아에서 태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평화학의 발전을 선도했던 지역이 스칸디나비아였다면[42] 새로운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문명사적 모순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그 진원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구조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

41) Gerald M. Steinberg, "The Thin Line Between Peace Education and Political Advocacy: Towards a Code of Conduct," A paper presented at the UNESCO conference on Educating Towards a Culture of Peace, December 2003.

42) 왜 스칸디나비아에서 평화학이 발전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pp. 127-151.

참고문헌

이광수, 2005,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연대의 전망,” 『시민운동 현장』.

조희연, 2004,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시민과 과제』 제 5호/상반기.

하영선 편, 2002,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홍기준, 2004, “인간중심주의적 안보개념의 모색,” 『안보학술논집』 제 15집, 제 2호.

Adames, David, 2002, “The American Peace Movements,” http://www.culture-of-peace.info/apm/chapter6-15.html.

Barringer, Mark, 1999, "The Anti-Wa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http://www.english.illinois.edu/maps/vietnam/abtiwar.html.

Cheldelin, Sandra, Druckman, Daniel and Fast, Larissa eds., 2003, *Conflict: From Analisis to Intervention,* London: Continuum.

Docena, Herbert, 2003, "Jakarta Peace Consensus Update: Where is the Antiwar Movement?," Foreign Policy In Focus, http://www.fpif.org/fpiftxt/2713.

Ebro, Tina and Cruz, Maris dela, 2008, "Highlights of the Seventh Asia-Europe People's Forum" http://www.alterinter.org/article3220.html.

Galtung, Johan, Jacobsen, Carl G. and Brand-Jacobsen, Kai Frithjof, 2002,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London: Pluto Press.

Galtung, Johan, 1975, *Peace: Research·Education·Action: Essay in Peace Research* Vol 1, Copenhagen: Christian Ejlers.

Kodama, Katsuya, "The IPRA Path," IPRA web page, http://www.iprasydney2010.org/About_IPRA.html.

Mason, Gregory H., 2002, "Peace Studies in the Next Half-Century," *Peace Review,* Vol. 14, No. 1.

Mizumoto, Kazumi, 2004, "New Tasks for the Peace Movement in Hiroshima: Sixty Years after the Atomic Bombing," *Hiroshima Research News*, Vol. 7, No. 2.

Sandole, Dennis J. D., 1990, "The Biological Basis of Needs in World Society: The Ultimate Micro-Macro Nexus," in Burton, John W. eds., 1990, *Conflict: Human Needs Theory,* Palgrave: Macmillan.

Steinberg, Gerald M., 2003, "The Thin Line Between Peace Education and Political Advocacy: Towards a Code of Conduct," A Paper presented at the UNESCO conference on Educating Towards a Culture of Peac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02-961-0995~6 Fax 02-961-0997
E-mail gafc@khu.ac.kr http://gafc.khu.ac.kr